

프랑스 마크롱 정부 최근 동향과 시사점

윤 기석(충남대)

I. 서 론 : 프랑스 결선투표 도입과 정치체계의 특징

1. 안정된 양극적 다당체계 구축

- 2017년 5월 프랑스 대선은 제5공화국 정치사에서 유례 없는 선거결과를 보여 주었음
 - 신당 중도 후보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사회당, 공화주의 보수파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기 때문
 - 그동안 프랑스 대선은 결선투표로 인해 사회당과 공화주의 우파 후보가 최종 승부를 겨루는 구도였음
 - 예외적으로 1969년 대선은 중도우파와 드골 보수파 두 후보(A. Poher, G. Pompidou)가 결선에서 경합하였으나 폼피두 드골 보수당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고, 2002년 대선은 제5공화국 최초로 국민전선 장 마리 르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였으나 보수당 작크 시락크 후보가 압승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당과 공화주의 보수파는 정권 교체를 반복하면서 정치 주류를 형성해 왔음
 - 이는 결선투표의 정치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양극적 다당체계를 구성

하였고 이는 1961년부터 1986년까지 지속되었음

2. 동거정부 등장과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대두

□ 그러나 1986년 첫 번째 동거정부가 등장하여 하원 해산 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다시 집권하였으나 그 후 반복된 동거정부의 등장(1993년, 1995년)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

3. 2,000년 5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단행

□ 3차례의 동거정부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대통령 선출시기와 총선 시기를 일치하는 제도 개혁만이 불안정한 국정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 합의이었음

- 동거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구조의 불안정성 인데 프랑스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구조 체제를 빈번하게 바꾸면서 정치와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 자체의 불안정과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촉발할 수 있었기 때문
- 이처럼 동거정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이유로는 우선, 프랑스의 정치지형은 사회당과 공화파를 중심으로 한 다당제에 근접하여 정당들이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밖에 없는 정치 체계인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유럽 통합, 세계화 등의 국제정세는 프랑스 정치에 변화를 요구해 왔음
- 그런데 이에 부응하지 못한 좌우과정부의 실정은 유권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심판을 했기에 빈번한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게다가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비추어 임기 7년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었고 동거정부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대통령 임기제 단축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었음. 이에 7년제 대통령 임기를 5년제로 단축하는 개헌이 2000년 5월 시라크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고 그해 9월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되었음

II. 유권자 균열과 양극적 다당체계의 변화

1. 정당 균열의 원인

- 프랑스는 2000년대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당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음. 하나는 민족주의 정체성(identity)과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균열이며, 다른 하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탈세계화(altermondialiste)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균열임(Pierre Martin 2017, 261-263).
- 전통적인 프랑스의 양극적 다당 체계가 2017년 대선과 총선 결과에 의해 재편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두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당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 하나는 민족주의 정체성(identity)과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균열이며, 다른 하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탈세계화(altermondialiste)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균열(Pierre Martin 2017, 261-263).
- 우선 '민족주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주의' 균열구조는 프랑스 유권자의 글로벌 인식, 증가하는 이민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국민전선(FN)은 좌우 정당의 이민 정책은 프랑스 실업률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비난
 - 이에 따라 고용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경제를 어렵게 하고 그러한 원인이 사회당과 보수당 이민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국민전선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는 기존의 보수파에서 분열된 유권자이고 극우적 민족주의로 결집된 지지 세력이었음
 - 이런 결과 '민족 정체성과 세계시민주의' 균열 구조는 보수파를 지지하는 유권자 층을 균열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보수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제도의 틀 안에서 민족 정체성과 세계시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반면에 국민전선은 배타적 민족주의의 가치에 천착한 나머지 인종차별 정책과 탈유럽연합 정책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
 - 이는 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민과 개도국 난민 문제를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도우려 하며, 지구촌 가족이라는 연대의식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정당의 정책에 반하는 분파된 보수 세력이기 때문

□ 다른 하나는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경제 위기가 프랑스 좌파진영의 유권자를 균열시켰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저항하는 탈세계화 운동에 기인함. 2008년 금융위기는 유럽 뿐 아니라 프랑스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화약고였음

-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었던 충격은 매우 컸고 금융위기는 중산층과 봉급생활자에게 커다란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거나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었음

- 사회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전통적인 사회당지지 세력에 실망을 주었고, 특히 이들은 세계화 담론을 생산한 정치세력 전체에 반감을 갖게 되었음

- 따라서 탈세계화 가치를 추종하는 새로운 정당이 좌파진영에서 만들어지는데 2010년 초반 ‘프랑스 불복종(La France Insoumise)’은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당

□ 위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발생했던 경제금융엘리트에게 매수된 정치권력을 시민사회로 되돌려 주기 위한 정책을 주장

- 게다가 탈세계화 가치를 추종하는 정치세력은 사회 불평등 구조나 세계화에 대한 반대 뿐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할 정책을 제안함

- 녹색좌파당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며 좌파진영은 이처럼 극좌정당, 녹색좌파당, 사회당 등으로 분파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정리하면 프랑스 정치의 균열구조는 국제환경과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계급정당 구조를 띤 1960년대의 정당체제는 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계급이라는 좌표로 정당체계를 분류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며, 최근 프랑스의 정당체계 변화는 2000년 후 전개되었던 탈세계화 가치와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유권자 균열구조로 말미암아 2017년 프랑스 대선은 정치 지형 변동을 촉발시킨 선거였다고 볼 수 있음

2. 2017년 5월 대선투표 유권자 분석

□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기존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충성도가 균열된 결과를 보여주었음

□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6인에 대하여 유권자의 선호도를 분석하면, 정당체계 균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항목은 구매력, 이민, 실업문제, 테러, 세계 개편, 사회적 불평등, 치안, 건강의료체계, 유럽연합, 환경문제, 공공부채 등 총 16개 항목. 위 항목을 기준으로 후보 지지도를 분석하면 유권자의 의식변화와 정당지지를 바꾼 원인을 알 수 있음

- 극좌파 멜랑송 후보와 사회당 아몽 후보는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정책 개선을 원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고

- 극우파 르펜 후보는 이민문제, 테러, 치안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으나 아이러니하게 르펜을 지지했던 유권자는 국민전선이 내세운 실업률 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여주었음

- 공공부채를 가장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후보로는 공화 보수파 피용 후보를 선택했음

□ 반면에 마크롱은 보수와 좌파 유권자 양쪽 모두의 지지를 얻었음

- 보수의 입장에서는 마크롱이 제안한 사회적 불평등 해결 정책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 급진적 성향이 덜 하다고 판단했고, 좌파 유권자의 경우에는 마크롱의 이민정책이 보수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

□ 이를 정리하면 좌우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모두 수렴할 중도 노선 정책을 펼칠 후보로 마크롱은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마크롱을 지지한 보수 유권자는 공공부채의 해소와 공공기관 근로자 감원,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 등을 지지하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을 받은 것이고 좌파 유권자중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마크롱이

유럽연합 탈퇴가 아닌 개혁으로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잃지 않을 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에 선택한 것이며, 이민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1>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의 투표 동기¹⁾

%로 표기

	전체	멜랑송 (LFI)	아몽 (PS)	마크롱 (LFEM)	피용 (LR)	듀퐁-에 낭 (DIF)	르펜 (FN)
구매력	27	35	28	30	18	31	21
이민	26	7	3	6	33	32	69
실업	25	23	22	32	27	32	19
테러	24	10	11	17	28	26	46
세금/조세	21	17	12	22	27	29	17
사회 불평등	20	42	45	15	6	13	10
치안 문제	19	6	5	11	24	18	42
의료체계	18	21	26	24	12	21	9
유럽문제	18	11	20	25	19	14	18
노동 문제	16	21	23	17	19	16	5
정치 기능	15	23	17	22	5	15	5
교육체계	14	14	20	22	12	12	4
공공적자와 부채	12	5	6	12	32	12	5
환경	10	22	32	9	1	7	3
미래 공공서비스	8	15	13	10	4	4	3
국제 문제	4	3	3	4	11	4	2

출처 : IPSOS. Pierre Martin, “Un seisme politique : l’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17”, *Commentaire*, n°158, 2017, p.257. 재인용.

1) LFI(La France Insoumise : 프랑스 불복종), PS(Parti soialiste : 프랑스 사회당), LFEM(La France En Marche : 전진 프랑스), LR(Les Républicains : 공화파 보수당), DIF(Debout La France : 프랑스 부활), FN(Front National : 국민전선).

3. 2017년 총선 결과 분석 : 군소정당의 약진(FN, Extreme Gauch, Ecologie)

- 2017년 6월 치러진 총선결과는 총선이 대통령 선거의 3차 투표라는 가설을 확인시켜준 선거였음

-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마크롱 ‘공화국 전진(La République en marche)’은 하원 전체 577 의석 중에서 308 의석을 확보하여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음

- 반면에 사회당은 불과 1개월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의 참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겨우 30 의석만을 얻는 최악의 결과를 얻었음
 - 이는 2012년 총선에서 278 의석을 얻은 결과와 비교하면 무려 248 의석이 날아간 것
 - 공화파 보수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정이 조금 나아짐. LR, UDI, DVD 등의 보수당은 총 136 의석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2012년 총의 216 의석보다 80 석이 낮은 결과이지만 그래도 선전한 결과였음
 - 극우파 국민전선의 경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대통령선거에서 르펜 후보가 결선투표에까지 진출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의 의석만을 얻는 약세를 면치 못하였음
 - 반면에 6월 총선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정당은 좌파의 ‘프랑스 불복종’ 임. 총 17의석을 확보하였고 대선후보 멜랑송도 마르세유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쾌거가 있었음. 공산당은 10석, 녹색당은 단 하나의 의석만을 확보했을 뿐임

<표 2> 2017년 6월 프랑스 총선 결과²⁾

Nuances de Candidats	Nb Sieges	%
Extrême gauche	0	0
Parti communiste français	10	1.7
La France insoumise	17	2.9
Parti socialiste	30	5.2
Parti radical de gauche	3	0.5
Divers gauche	12	2.1
Ecologiste	1	0.2
Divers	3	0.5
Régionaliste	5	0.9
La République en marche	308	53.4
Modem	42	7.3
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18	3.1
Les Républicains	112	19.4
Divers droite	6	1
Debout la France	1	0.2
Front National	8	1.4
Extrême droite	1	0.2
Total	577	100

출처 : https://www.interieur.gouv.fr/sections/a_votre_service/elections/resultats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

2) La France insoumise (프랑스 불복종), Parti socialist(프랑스 사회당), La République en marche(공화국 전진), Les Républicain(공화파 보수당), Front national(국민전선).

<표 3>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총선 결과(2002~2017)

	2002 대선	2002 총선	2007 대선	2007 총선	2012 대선	2012 총선	2017 대선	2017 총선
Votant	71.6/79.7	64.4	83.8/84	60.4	79.5/80.3	57.2	77.8/74.6	48.7
Expimés	69.2/76.3	63	82.6/80.4	59.3	78/75.7	56.3	75.8/66	47.6
Extrême gauche	10.4	2.7	5.8	3.4	1.7	1	1.7	0.8
Front de gauche/La France insoumise	0	0	0	0	11.1	6.9	19.6	11
Parti communiste	3.4	4.9	1.9	4.3	0	0	0	2.7
EELV	5.2	4.4	1.6	3.3	2.3	5.6		3.5
Parti socialiste/ Parti radical de gauche	18.5	25.3	25.9/46.9	26.4	28.6/51.6	30.9	6.4	7.9
Divers gauche	0	1.4	1.3	1.6	0	3.5	0	1.6
	0	0	0	0	0	0	0	0
Divers	7.2	3.5		2.3	0.2	1.9	2.3	3.6
Centre	0	0	18.6	7.6	9.1	2.3	24/66.1	32.8
UDF/UDI	6.8	4.8		2.4		2.1		3
UMP/Les Républicains	19.9/82.2	33.4	31.2/53.1	39.5	27.2/48.4	27.8	20	15.8
Divers droite	9.3	7.4	3.3	4.5		3.6		2.6
Debout la France	0	0	0	0	1.8	0.6	4.7	1.2
Extrême droite	2.3	1.1	0	0.4		0.2	0	0.3
Front national	16.9/17.8	11.1	10.4	4.3	17.9	13.6	21.3/33.9	13.2
Total gauche(좌파 총 합계)	37.6	38.7	36.4	39	43.8	47.9	27.7	27.5
Total centre(중도 총 합계)			18.6	7.6	9.1	2.3	24	32.8
Total droite(우파 총 합계)	55.2	57.8	45	51.1	46.9	47.9	46	36.1

출처 : Pierre Martin, “Un seisme politique : l’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17”, *Commentaire*, n°158, 2017, p.255.

Ⅲ. 2017년 선거와 탈 정당화 경향

1. 탈 정당화 현상

- 2017년 프랑스 대선이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1958년 이후부터 지속된 이러한 프랑스의 양당 정치 구조가 무너졌다는 것임
-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정당은 결선투표에도 진출하지 못한 반면 중도를 표방한 마크롱(Emmanuel Macron)이 결선투표에서 66.1%의 지지를 얻어 33.9%를 득표한 극우정당 후보 마린 르펜(Marine Le Pen)을 누르고 승리했기 때문
- 2011년 지도부 세대교체에 성공한 국민전선의 선전은 전국 지지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이미 성장한 상황이었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4개월 전까지 설문조사에서 득표율 3위로 예측되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것은 이변이라 볼 수 있음

2. 마크롱 대선 운동 특징

- 그런데 보다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점은 이처럼 규모의 의석수 확보를 가능하게 한 ‘공화국 전진’의 조직 구성임
- 공화국 전진은 기존 정당의 유력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정비하지 않았음
- 일레로 사회당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마크롱 지지 선언을 했던 마누엘 발스는 후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화국 전진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선거구에서 마크롱 정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예우를 얻는 데에 만족해야 했음
- ‘프랑스 전진당’은 대선 과정에서 약 37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1천 5백만 유로(한화 약 2백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총선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당’이 아닌 ‘운동’ 조직으로 규정하는 전략을 펼쳤음

- 당원 가입은 무료였으며, 일정기간의 가입기간이 확보되면 내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역 대표는 20%를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3년 중임으로 총 6년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음
- 심지어 다른 정당에 가입한 당원이라도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의사에 따라 위원회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음
- 전진하는 공화국 후보 공천은 남녀동수대표제 원칙에 따라 후보 중 50.7%를 여성 후보에게 배정했음
- 후보 연령도 평균 약 46세로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52%의 후보는 선출직 의원활동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이었음. 다만 후보자의 직업이 의사 43명, 변호사 28명, 교육 종사자 87명으로 전문직에 치중된 반면 노동자는 2명, 농민은 11명에 불과했으며, 후보 중 약 100명이 그랑제콜 혹은 전문경영과정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았음(오창룡 2017)

3. 중도 공화국과 투표를 하라

-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제5공화국은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언제나 변함없이 서로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역사를 기록해 왔음
- 따라서 마크롱의 노선을 되짚어 보면 그가 표방한 ‘중도’가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양 정당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면, 두 정당 사이에 위치한 중도의 이념적 기반이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대 정당 역시 좌파 혹은 우파임에 앞서 ‘중도’로서의 성격을 스스로 먼저 강조했음을 상기한다면 중도의 개념적 영향력이 이미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뤼레(Francois Furet) 등의 학자들은 프랑스의 양대 정당 구조를 ‘중도 공화국’이라 지칭한 바 있음(Furet et al. 1988)
- 여기서 중도 공화국이란 1980년대 이후 좌우 정당들이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상황을 부정적 뉘앙스로 평가하는 것임(오창룡 2017)
- 1980년대 사회당 미테랑 집권 이후 정당강령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노조가 온건해졌으며 노사 갈등과 파업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 의회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정치인들 간의 정파별

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음

- 드골주의 전통에서 성장한 국가개입 원칙이 신자유주의 개혁 지향과 모호하게 혼합되었으며, 집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영화 개혁을 포기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한 미테랑과 사회당 정치에 대한 환멸이 증가했기 때문
- 여기서 중도 공화국은 변화를 추구하는 급진 정치의 쇠퇴, 사회 변혁 동력의 상실을 의미함. 이 중도정치의 확장은 기권율 증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음
- 중재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약화되고 국립행정학교(ENA) 출신 엘리트 정치만이 가속화된다는 비판이 확산되었음, 극우 국민전선의 성장 역시 대중들의 반 엘리트주의가 표출된 결과로 설명되었음(Furet et al. 1988, 143)

□ 이러한 배경에서 ‘우파도 좌파도 아닌’이라는 정당 슬로건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 녹색당은 같은 슬로건으로 1992년 지방 선거에서 14% 득표율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Laborde 1999, 164-6)
- ‘중도 공화국’ 비판을 2017년 선거에 적용할 때 왜 그토록 많은 프랑스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음
- 프랑스 대선과 총선 기권율은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대선 1차 투표 기권율은 1981년 18.9%, 1988년 18.6%, 1995년 20.6%, 2002년 27.8%의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2007년 다시 16.2%로 떨어졌으나, 2017년 22.2%로 다시 상승했음
- 총선 1차 투표 기권율은 1988년 30%대를 돌파하고, 2012년 40%대, 2017년 50%대를 기록하며 증가에 가속도가 붙었음, 특히 2017년 총선 결선투표 기권율은 57.36에 이룸
- 2017년 프랑스 선거의 경우 대선보다도 총선 참여도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 측면에서 공화국 전진의 참신성이 대중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오히려 프랑스 제5공화국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배해 온 중도 엘리트정치에 대한 환멸이 강화되는 맥락에서 치러진 선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오창룡, 2017; 196-206)

IV. 신자유주의와 마크롱 정부

- 프랑스의 경우 중도 공화국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도’의 또 다른 이름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오창룡 2017)
- 1980년대 이후 사회당과 공화당 전신 정당들이 중도좌파 혹은 중도우파로 분류된 것은 자유주의 시장개혁을 지지하는 정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
- 로장발롱은 ‘중도공화국’ 논의에서 “프랑스가 예외주의의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보통법(le droit commun) 속으로 진입한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보통법이란 경제 개방, 기업 민영화, 자유주의 경쟁 수용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Furet et al. 1988)
- 아울러 프랑스 원조 중도정당의 시초가 된 프랑스 민주동맹(UDF)은 시장과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정통 드골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했던 자유주의 우파였음
- 즉, 광의의 중도, 협의의 중도 모두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 이러한 맥락에서 마크롱이 스스로를 중도로 표방한 것은 양대 정당 사이의 틈새를 찾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음(오창룡 2017)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선명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정치가 과거와 관계를 맺는 방식임
- 마크롱과 전진하는 공화국은 신자유주의 정당의 정치 계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는 형태로 선거 캠페인을 이끌었기 때문
- 이 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당이 반(反)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마린 르펜과 멜랑송을 꺾고 다시 한 번 승리를 이끌어 냈음
- 난과한 정당 정치를 버린 ‘운동’이 신자유주의를 지켜낸 것임, 멜랑송과 마린 르펜의 대선 1차 투표 득표율 합은 40.88%이었으나, 그들이 대표한 정당의 총선 1차 투표득표율 합은 겨우 13.61%에 불과했음(오창룡 2017)
- 탈 정당, 탈 계보의 신자유주의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2007년부터 5년 간 신자유주의 개혁 광풍을 일으켰던 사르코지는 계보 없는 우파 정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를 절충하는 데

에 실패한 중도 공화국의 오랜 딜레마를 강력한 ‘개성’ 으로 돌파하는 리더십을 선보였음

- 마크롱은 사르코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탈 정당정치를 선보였으나, 역시 계보 없는 정치를 실험하고 있음

□ 사르코지와 마크롱이 집권 초기에 보이는 리더십 행태에도 묘한 공통점이 있음

- 사르코지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대통령, ‘하이퍼 대통령’ 이라 불렸던 것처럼, 마크롱은 ‘주피터’ 대통령이라 불리고 있음
- 정당과 제도를 넘어서는 개인적 리더십으로 자유주의 개혁 국면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집권초기 지지율 급락이라는 레퍼토리까지 닮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프랑스 정당정치 몰락과 권력의 인격화(personalization) 현상은 신자유주의 정치의 “통치불가능성” 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당초 “통치불가능성” 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보수주의자들이 복지국가의 실패를 주장했던 논리에서 등장한 개념(오창룡 2017)

- 이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기대가 증가하고 이익집단이 난립하면서 정치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통치가 불가능해진다는 테제를 제기했음
- 나아가 정부가 효율성과 대중적 지지를 동시에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하며, 복지정책과 사회협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권위주의와 강압적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신자유주의 정치가 본격화된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역시 ‘효율성’ 과 ‘정당성’ 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
- 그 딜레마 속에서 기존의 정당과 제도의 틀을 깨는 개인적 리더십이 신자유주의를 지키는 구원투수로 등판하지만, 장기적 비전 없이 직면한 문제들을 임기응변으로 해결하고 그 스스로가 쉽게 교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1978년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인격화’ 혹은 ‘인격화된 대통령제’ 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통치상의 책임은 의회로부터 행정부 수뇌로 대대적으로 이동

- 하며, 정당은 대중의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행정부를 정당화함
 - 정당은 행정에 종속되어 정부의 결정을 홍보하는 전달벨트의 역할을 맡거나 혹은 국가 행정에 대한 모든 접근을 단념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됨
 - 이러한 결과 실질적인 권력이 정부 및 행정기관의 상층부로 편중되는 경향이 발생하며 국가장치의 중앙집권화는 모든 탈 중심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된다고 설명함
- 이러한 변화를 신자유주의 정치의 일반 경향으로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프랑스 사례에 국한할 때 폴란차스의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전진하는 공화국의 탈 정당 전략은 낡은 정치를 극복한다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수세에 몰린 신자유주의 정치가 집권을 위해 도입한 임기응변적 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오창룡 2017 200-201)

V. 소결 : 마크롱 정부 전망

- 취임 석 달여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나며 위기에 몰렸던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개혁 성과 등을 등에 업고 지지율 반전의 주인공으로 부상했음
- 불과 한달 사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9%포인트 이상 개선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전례 없는 현상’이라는 찬사를 받았음
- 특히 강성 노조 등의 반발에도 각종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데 따른 것이어서 고무적이라는 평가
- 그러나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마크롱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노조 파업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음(철도공공노조 파업, 교원노조 파업 등).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일환
- 이와 더불어 하원 577석을 1/3으로 감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청원권 강화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개혁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런데 마크롱식 정치개혁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의회의 힘을 약화시켜 ‘행정 독주’ 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맞게 의회 표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회의 전체표결로 가는 법안 비율을 줄여 상임위 의결만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기 때문

- 그런데 미래 마크롱 정부의 전망은 곧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7년 총선에서 보여준 마크롱 식 탈 정당화 선거 운동과 정당 운영 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선거 결과가 평가해주리라 판단

참고문헌

- 강원택. 2006.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2006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서울. 7월 126-144.
- 김민정. 2004. “2002년 프랑스 대선을 통해 본 정당체제의 변화”. 『국제정치논집』 44-2. 212-236
- 박인수. 2003.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 『헌법학연구』 8-2. 121-138.
- 성낙인. 2001. 『헌법학』. 서울: 법문사.
- 오창룡. 2015. “프랑스 반자본주의 신당 및 좌파당의 부상과 위기 “.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 242-267.
- 오창룡. 2016. “극우 정당의 부상과 프랑스 공화주의의 미래“. 『오늘의 문예비평』. 101. 164-175.
- 오창룡. 2017. “2017년 프랑스 선거와 신자유주의 정당정치: 통치불가능성“. 『진비광론』. 73. 184-205.
- 윤기석. 2006. “한국과 프랑스 권력구조”. 2006년 한국프랑스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서울. 7월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현대정치연구』. 2008년 봄호. 169-198.
- 조홍식. 2001. “1981년 이후 프랑스 사회당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집』 41-3. 298-314.
- 조홍식. 2009. “프랑스 대통령 임기 5년제 개헌: 부분적 개헌의 성공”. 『한국정치학회보』 43-3. 174-306.

- Avril, Pierre. 1994. La Vème République. 2ème éd. PUF.
- Avril, Pierre. 1996. Le système politique français. PUF.
- Avril, Pierre. 1995. “La Fabrique Poiltique“ in La France Présidentielle. Paris: PFNSP.
- Quermonne, Jean-Loius. 2000. La Vème République. 4t. Paris: PUF.
- Cohendet, Marie-Anne. 2002.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is: Dalloz.
- Colliard, Jean-Claude. 1978. Les régimes parlementaires contemporains. Paris: FNNSP.
- Duhamel, Olivier. 1999. Le pouvoir politique en France. Paris: Seuil.
- Duverger, Maurice. 1958. Les partis politiques. Paris: Armand Colin, 3ème éd.
- Duverger, Maurice. 1974. Le système politique français. Paris: Armand Colin.
- Féré,Vincent. 2017. “Les conséquences d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Commentaires. n° 157, 114-121.
- François, Benoît. 2000. Le quinquennat. Paris: PFNSP.
- Lavaux, George. 1953. Partis politiques et réalités sociales. Paris: Armand Colin.
- Lascombe, Martin. 2001. Droit constitutionnel de la Vème République. 7ème éd. Paris: l’Harmattan.
- Herbert, Kitschelt 1997. “European Party Systems : Continuity and Change” in Martin Rhodes, Paul Heywood and Vincent Wright eds. Developemnts in Western European Politics. London. Macmillan.
- Martin, Pierre. 2002. “Analyse géograpique des évolutions électorales“ in L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n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Martin, Pierre. 2007. “Législatives de 2007 : un nouveau moment de rupture?“ . Commentaire. n° 119, 731-742.
- Martin, Pierre. 2017. “Un séisme politique : l’ 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17” , Commentaire. n° 158. 249-259.
- Martin, Pierre. 2017.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des 11 et 18 juin 2017, Commentaire. n° 159. 525-534.
- Rémond, René. 1982. Les droites en France. Paris: Aubier.
-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 and Voters Alignment.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Press.

프랑스내무부 http://www.interieur.gouv.fr/sections/a_votre_service/elections/resultats